

건설기업경기 6개월째 내리막

건설경기가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2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0.7포인트 하락한 84.5로 집계됐다. 2017년 12월(80.1)을 시작으로 6개월 연속 80선을 맴돌고 있다. CBSI는 일반 건설사업자의 경기 체감 수준을 판단하는 지표다. 기준선(100)을 밑돌수록 비관하는 기업이 많음을 의미한다.

주택 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확대, 거래시장 위축 등 부동산시장 침체가 원인으로 파악된다. 윤종현기자

“선진·신흥국에 낀 韓건설 더 매서운 기술혁신 필요”

李총리, 건설의 날 기념식서 ‘변화’ 주문

‘국민의 라이프마크(LifeMark)를 세웁니다.’

21일 오후 3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018 건설의 날’ 기념식장 곳곳에는 이런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라이프마크’는 라이프(Life)와 랜드마크(Landmark)의 합성어다.

업계 요구하는 ‘적정공사비 확보’ 건설업 혁신 방안으로 논의 강조
유주현 건단련회장 “새로운 환경 속 융복합 첨단산업으로 거듭날 것”

주최 측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라이프마크는 ‘우리 삶의 가치가 모여 빛나는 지평’이라는 의미”라며 “국민의 삶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건설산업으로 변모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건설의 새로운 가치와 미래를 ‘공간을 밝히는 건설(랜드마크)’에서 ‘우리 삶을 밝히는 건설(라이프마크)’로 재설정할 것이다. ▶관련기사 2면

이날 기념식 참석자들은 건설산업 관계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면서, 한편으론 건설산업의 변화를 주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건설산업은 그동안의 성취만큼이나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국내에선 인구구조 변화와 공공인프라 확충으로 건설수요가 줄고, 세계적으로는 선진국들의 질주와 신흥개발국들의 추격 사이에 끼어 훨씬 더 높은 기술혁신을 매섭게 요구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리는 건설산업과 문화의 질적 도약을 주문했다. 정부는 오는 28일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낡은 제도와 묵은 관행의 틀

에 갇혀선 국민과 세계의 달라진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R&D 투자로 기술혁신을 이루고,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큰따이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적정 공사비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적정 공사비가 주어져야 한다는 건설인 여러분의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충분한 공사기간의 확보 및 적절한 임금 보장과 함께 건설산업 혁신의 틀 안에서 함께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자기진단도 변화·혁신에 초점이 맞춰졌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국내외 경제 패러다임이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사회로 급속히 변화하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건설환경이 펼쳐지고 있다”면서 “기존 건설기술에 AI(인공지능), 로봇, 드론, 3D프린터 등 첨단 IT 기술을 접목해 융복합 건설산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더 이상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한반도 평화가 가져올 경제적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마침내 시작됐다”며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남북한 협력력이 먼저 시작되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기초조사 등도 준비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런 사업들이 건설업계를 비롯한 우리 경제계에 큰 기회를 제공하기 바란다”면서 “정부는 늘 건설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살피며 건설업의 혁신과 성장을 힘차게 돕겠다”고 말했다.

유 회장 역시 “건설산업이 선두에서 미래 대한민국의 시대적 임무를 완수하는 데 토론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kth@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8 건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이 총리를 비롯해 김원미 국토부 장관, 건설단체 및 건설사 임직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김영구 세진종합건설 대표와 김주만 비우하우스 대표가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안윤수기자 ays17@

'2018 건설의 날' 기념식 성료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이 21일 열린 '2018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李 총리·金 국토장관 등 1000여명 참석

“국민신뢰 회복, 안전·복지 위해 노력하자”

‘2018 건설의 날’ 기념식이 21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렸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이날 기념식의 주제는 ‘국민의 Life Mark를 세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그동안의 ‘공간을 밝히는 건설(랜드마크)’에서 ‘우리 삶을 밝히는 건설(라이프마크)’로 변화를 모색하려는 건설산업의 미래를 담았다.

건설의 날은 200만 건설인들의 화합과 결의를 다지고 건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81년 제정된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왔다.

올해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원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정우·김현아·송석준·윤관석·윤영일의 원, 유주현 건단련 회장 등 정부와 국회, 유관기관장 및 건설회사 임직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건설의 날을 축하하고 국내외 건설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건설산업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동안의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쇠신하고 투명·상생 경영을 통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건설인의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다짐식’도 진행됐다.

또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153명에 대해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김영구(세진종합건설 대표)와 김주만(비우하우스 대표)가 금탑산업훈장을, 윤영근(코젠 대표)가 은탑산업훈장을, 권순호(현대산업개발) 본부장이 동탑산업훈장을, 김화진(상원건설) 대표와 김종주(종협건설 대표), 박윤순(현이공사 대표)가 철탑산업훈장을 각각 받았다. 김태형기자 kth@

토·일요일자 신문 쉽니다

【 2018.6.22(금) 건설경제 】

‘건설산업 혁신방안’ 28일 베일 벗는다

건설산업의 새로운 미래방향을 제시하게 될 ‘건설산업 혁신방안’이 오는 28일 베일을 벗는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리는 장관급 회의 체에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성장동력 확보 전략과 생산구조 개편, 불공정 관행 방지 등을 큰 줄기로 한다.

성장동력 확보 전략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스마트 건설기술 확보, 해외건설 진출 지원방안 등이 담기게 된다.

생산구조 개편에는 칸막이식 업역과 단계 생산체계 개선안이, 불공정 관행 방지에는 발주기관과 원·하도급 간에 만연한 ‘갑질’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역·업종 개편과 적정 공사비 확보 등 쟁점이 많은 과제에 대해선 우선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 혁신 로드맵’은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를 통해 오는 9월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건협 강원도회 2차 운영위… 대표회원 2명 보궐 선출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는 지난 19일 강원도 춘천 도회 회의실에서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건협 강원도회는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자격상실 또는 대표회원 직무수행 불가 등

의 사유로 결원 중인 도회 대표회원 2명을 보궐 선출했다.

또한 평창 대관령면 차항천에 발생한 수해복구비 지원의 건을 협의했다.

임성엽기자



남북경협 바람 타고 ‘北강원도 접경지역’ 주목

‘춘천~원산’ 거점 잇는 내륙 교통망 건설해야

北 ‘원산~금강산’ 일대 국제적 관광지구 개발 힘써 내륙 중심 연결도로는 취약 남북 경협 인프라 확충엔 금강산~동해안 아우르는 대규모 관광권역 조성 기대

남북 교류협력력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강원도 북한지역인 ‘북강원도’ 접경지역을 거점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남북 경협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남한 강원도와 북강원도의 공간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한 지역에 속하는 ‘강릉~제진’ 철도 구간 복원과 더불어 강원내륙 거점과 북강원도를 연결하기 위한 인프라 개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1일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북강원도에 속하는 원산~금강산 지역을 국제적인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북강원도는 금강산관광특구와 원동공업개발구가 특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시작된 후 2013년 5월 경제개발법 채택으로 지방경제발전 거점으로 지정된 22개 경제개발구 중 하나다.

특히 관광산업을 북한경제 회복의 동력으로 삼은 김정은 정권은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조성을 첫 사업으로 삼는 등

북강원도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국제관광지대 설정 지역은 동해안 연안지역으로 원산시와 법동, 안변, 통천, 고성, 금강산을 아우르는 대규모 지역이다.

이에 남북 경협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강원도 주요 거점 간에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현재 동해안 교통망 연계 여건은 양호하지만, 강원 내륙거점과 원산, 평양을 연계하기 위한 교통망은 취약하기 때문이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고성~원산~평양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노선이 개설된 상태지만 북강원도 내륙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는 없다. 해안 중심의 도로망이 비교적 잘 갖추어진 반면 내륙 연결도로는 취약하다는 평가다.

이에 원산을 중심으로 남한 춘천 등 강원 내륙거점지역과 평양이 내륙 교통망으로 연결된다면 북한에서 개발 중인 원산~금강산 지역에서부터 강원 동해안까지 아우르는 대규모 관광권역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원산과 근접한 거점지역인 함흥과 청진지역까지 협력사업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쳐진 북한 동부지역이 중심지로 형성될 수 있을 전망이다.

조명호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선 검토 중인 동해선 철도 연결과 함께 강원 내륙발전축과 함흥·원산지역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기반을 확충하고 북한 접경지역의 양호한 인구기반을 활용한 교류협력사업을 위한 접경거점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

‘동서고속화철도’ 종착역 이전논란 다시 불붙나

민선 7기 속초시장 당선인의 동서고속화철도 종착역 위치 이전 문제 공론화 거론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철수 속초시장 당선인은 지난 19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종착역 위치 이전 문제를 공론화해 시민 여론을 수렴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당선인은 “조양동 동광사 인근에 역사가 들어서면 도시를 통과하는 철도 등으로 지역이 양분되고 도시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역사를 속초와 고성군 경계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공론화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접 자치단체와의 관계개선 과 시, 군 통합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역사 이전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당선인이 이 문제를 거론함에 따라 지난해 속초 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동서고속화철도 종착역 위치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동서고속화철도 종착역은 예정지가 점정 선정된 상태다. 국토교통부의 기

“공론화해 시민여론 수렴” 김철수 속초시장 밝혀 속초-고성 경계지역 들쭉

본계획고시기가 이뤄져야 위치가 최종 결정된다.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며 환경부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기본계획이 고시될 예정이다.

동서고속화철도 종착역 위치는 국토교통부와 강원도, 속초시의 협의 과정 등 그동안의 진행 상황으로 볼 때 다른 곳으로 옮기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속초시는 지난해 7월 26일 역사 예정지인 노학·조양동의 584필지 0.72ha에 대해 오는 2022년 7월 26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역사 위치를 변경하는 문제를 공론화해보겠다는 김 당선인의 발언이 알려지자 속초시청과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시

민과 외부인들의 전화가 잇따라 걸려 오는 등 술렁이고 있다.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김 당선인의 발언이 보도된 20일 오전부터 역사 예정지 주민들 사이에서 이야기 가 퍼지고 문의전화도 이어지고 있다”며 “내용을 자세히 몰라 답변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역사 위치는 역사권 형성과 도시개발 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결정하는 문제는 시민들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며 “시민 대부분은 외곽지역 이전을 반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속초시 관계자도 “역사 위치 이전 검토 보도와 관련한 문의전화가 걸려오고 있으나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해주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31일 속초 군도자복지관에서 열린 동서고속화철도 시민설명회에서는 도시 양분론 막기 위한 철도 지하화와 함께 지하화가 안 될 경우 외곽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